

대한민국 시민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결정요인 분석*

박윤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일한 분석 모형 도출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 소속감을 광역, 기초, 근린 세 수준의 단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의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정부 신뢰, 납세 공정성, 사회적 지위,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소속감은 자가 거주, 삶의 만족, 정부 신뢰 및 의사소통, 포용성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학력층과 진보 성향일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통합적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가 자부심, 지역 소속감, 사회정체성 이론, 결정요인

I.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K콘텐츠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류열풍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와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성과들은 내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자국 문화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높이고 결국 국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 자부심은 한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나타내고 시민이 표출하는 다양한 행동양식과 인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녹록지 않은 대외적 정치·경제적 위협 요인에 맞서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강화하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긍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역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공동체 구현에 있어 중요한 맥락을 갖

* 본 연구는 2023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ypark@kyonggi.ac.kr)

는다. 특히 지역 소속감은 주민의 정책적 지지, 참여 거버넌스, 사회적 연대 및 갈등 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 소속감의 실태를 진단하고 광역부터 근린 지역단위에 이르는 소속감 형성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소속감의 강화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수용성 높은 지역 정책의 설계, 지역 거버넌스 강화, 사회통합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인다. 지역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높은 소속감 형성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또한 높은 국가 자부심은 국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개념의 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부심이나 지역 소속감을 다루었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가 자부심 또는 지역 소속감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왔다. 또한 지역 소속감을 다룬 연구들도 광역 혹은 기초의 단일한 지역단위 수준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동시에 단일한 분석 모형을 수립하고 특히 지역 소속감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근린(읍·면·동)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리하여 비교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 특성, 정부 특성, 사회 자본,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인구 특성의 5개 특성 요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을 발굴하여 두 유형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 소속감의 지리적 단위의 차이에 따라 결정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속감의 공간적 다층성(광역·기초·근린)이라는 측면을 하나의 분석 모형에 동시에 다루어 소속감의 다층적 구조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부 특성과 사회 자본 및 생활 특성 등을 동시에 통제하여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간의 영향요인의 공통분모와 차별적 요인을 동시에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제시하고, 3장은 연구 방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소개하며, 4장에서는 기술통계 요약, t검정 및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후 마지막 5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국가 자부심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

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¹⁾. 자부심은 이를 발생시킨 원천이 되는 성취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인했는지 아니면 집단적 차원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적 자부심과 집단적 자부심으로 구분된다(Chakrabarti, 1992). 그중 집단적 자부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누군가가 또는 집단 전체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갖는 자부심이기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적이나 집단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남경태, 2022). 결국 이러한 집단적 자부심은 사회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자부심으로 확대되어 국가와 국민의 성취가 개인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자부심의 이론적 토대로 제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반해 확립한다는 소위 사회정체성 이론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구축된 정체성을 기초로 드러나는 행태가 사회적 집단을 통해 발현되는 행동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오유선 외, 2023). 사회정체성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Tajfel과 Turner(1986)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 속한 그룹이나 사회를 개개인이 인식하는 자부심 혹은 자존심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속한 그룹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정체성 형성의 3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 단계는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로 사회적 범주를 주류인 'in group'과 비주류인 'out group'으로 구별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범주가 바로 인종, 성별, 종교, 이념에서의 범주 구분이다. 이어지는 단계는 사회적 일체화(social identification)로 개인 속하는 집단이 정해지면 국민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에 연계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의 단계로 개인이 스스로 한 집단의 구성원임으로 인식하고 그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과 연결한 후 다른 집단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결국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구성원이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감정과 가치의 산물이기에 집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Hogg and Abrams, 1988).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의한다고 본다(Tajfel & Turner, 1985). 이는 곧 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가가 곧바로 개인의 자기 정체성 강화와 자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성취를 이루게 되면 본인의 자존감 역시 증가하고, 반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낮은 평가를 받고 실패하면 본인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오유선 외, 2023). 이러한 자존감은 자긍심으로 발전하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집단의 가장 큰 단위인 국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스스로 'in group'에 속한다는 우월성의 심리를 기반으로 사회정체성은 그 이상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한편 사회정체성이 거시적 공간 단위로 확장된 개념인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국민이 지니는 신념체계로 볼 수 있다(Wigging, et. al., 1994). 한 나라의 국민으로 느끼는 동질성과 소속감에 대한 인식, 태도, 신념인 국가정체성을 Heath와 Tiley(2005)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한다. 이는 혈통 혹은 문화적 전통에서 국가정체성이 형성된 측면과 범

1)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이나 제도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시민적 측면이다(오유선 외, 2023).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오늘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통적 민족국가의 퇴조와 시민사회의 성숙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 공유하는 법·제도적 정체성에 기초한 시민적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을 기반으로 국민은 국가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을 국가적 관점에서 연계해 이해하며 국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가 자부심은 국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역량과 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초로 국가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감정(Smith & Kim, 2006)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 자부심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며, 사회공동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범을 공유 및 통제하는 핵심적 기제이다(오유선 외, 2023).

결국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국가 자부심은 집단 중심의 사회정체성이 국가정체성과 국가동일시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막연한 소속감의 수준을 뛰어넘어 국가에 대한 높은 긍정적 신뢰를 강화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술한 시민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할 때 국가 자부심은 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법·제도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 자부심은 국가의 법체계 및 제도의 수용성 향상, 정부신뢰의 제고, 정책지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지역 소속감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소속감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고유의 정체성 수립이 전제된다(박경화 & 이승혁, 2024). 따라서 전술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사회 정체성 형성 과정은 지역 소속감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개인이 속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중 공간적 혹은 영토 기반의 지역 공동체는 특히 개인의 일상과 더 나아가 인식과 태도를 크게 지배하는 기반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어떤 장소와 공간의 특성은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거주민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장소적 측면의 소속감이 갖는 중요성은 소속감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립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인 Antonisich(2010)의 주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다분히 모호하게 정의되는 소속감의 개념이 장소적 측면과 소속감이 갖는 정치적 측면을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지역 소속감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하여 갖는 정서적인 유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와 형성하는 긍정적 유대감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간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유대감 형성을 강조한다(Altman & Low, 1992). 장소 애착은 주민이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심리적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소통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애착의 개념적 이해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 Scannell과 Gifford(2010)은 소위 3P로 대표되는 사람

(person), 과정(process), 장소(place)의 측면에서 장소 애착을 설명한다. 따라서 장소 애착은 사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결정되며, 과정 차원에서는 장소 애착이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서와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장소 차원에서 공간적 특수성과 물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주민들은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이웃과 지역 공동체에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지역정체성과 지역 소속감을 강화하게 된다(엄영호·엄광호, 2017).

2. 한국 사회에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연구의 의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그 나라의 국민이 갖는 고유의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회 지표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승인통계 중 하나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매년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조사 기관에서도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조사하여 그 변화 추이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²⁾. 특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며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서운석, 2009). 전통적인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하고 개인주의의 팽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 수준에서의 공동체 유대감을 균형감있게 도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사회통합의 과제이다(장용석 외, 2012; 박경귀, 2017; 심승우, 2022).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분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갖는 정체성의 실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신뢰나 시민 참여를 비롯한 사회통합적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국가 자부심에 관한 연구는 국민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전술했던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없이 단기간의 초고속 산업화 이후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성과에 기반한 자부심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남기정, 2008). 하지만 이에 수반되었던 급격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 정치적 양극화, 국제화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불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타인과의 비교에서 빚어진 상대적 박탈감의 만연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국가 자부심 수준과 성격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보윤·김동훈, 2015; 이해경, 2019). 따라서 국가 자부심을 단순한 감정적 애국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 신뢰, 사회 자본,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기초해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민주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지역 소속감에 관한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정서적이며 인식적인 기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천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전술한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에 관한 논의

2)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워 58%, 2019년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일보, 2023년 11월 11일 기사

는 개인이 특정 장소를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내면화하고, 정서적 유대를 다지는 기초라고 설명한다(Scannell & Gifford,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넘어 정체성과 소속감의 불균형으로까지 그 상황이 악화하는 형국이다(김상민·이성원, 2025).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은 지방자치의 토대와 동력으로 작동하는 주민참여, 지역 정책에 대한 수용성, 공동체 회복력을 촉진하며, 이는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김민예·문국경, 2025). 따라서 지역 소속감의 수준과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다층적 정체성(multi-level identity)의 구조에서 교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 참여 행태에 한정된 분석에 머무른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서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상호보완적이거나 대체적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이동한, 2022)³⁾. 예컨대 국가 자부심이 높은 주민이 반드시 지역 소속감도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민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행태가 지역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반대로, 지역 공동체 활동에 높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일수록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예상할 수도 있다(이혜인·홍준형, 2013). 따라서 두 개념의 다층적인 정체성 구조를 실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정책 현장에서 실천적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합법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 자부심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Tyler, 1990), 지방정부의 신뢰와 공공서비스 만족도의 수준은 지역 소속감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공정성 증진이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확인되고 있으며(박정인·박민근, 2024),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정책적 성과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나 투명성(perceived transparency)의 요소를 통해 지역 소속감을 증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펼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갖는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신뢰 및 대인 신뢰,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형성의 수준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연구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지역 분권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책 설계의 견고한 토대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관계를 다층적 틀 안에서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 자본과 신

3) 실제 지난 2022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지역소속감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은 88%에 이르는 반면에 지역 단위의 소속감은 광역시도 70%, 시군구 65%, 읍면동 63%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지역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2년 5월 17일)

회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전략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국가적 단위 상징적 통합 및 연대가 지역 단위의 생활 공동체적 유대와 동시에 유지 및 결합하는 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조건이다(곽현근, 2017). 결국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결합은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한 '분권과 통합의 병존'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3.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주요 결정요인 검토

앞에서 살펴본 주요 이론적 논의와 같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개인의 사회 정체성, 사회 자본, 정부 신뢰와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틀을 토대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생활 특성, 정부 특성, 사회 자본 특성,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의 다섯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사회통합 및 정체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예를 들면 Delhey, 2007; Newton, 2001)에서 개인 수준의 요인들과 제도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틀을 확장해 수립한 것이다.

우선 생활 특성은 개인이 속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삶의 만족도를 통해 주민이 자신을 국가와 지역에 대해 동일시하는 현상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주유형, 점유형태(특히 자가 여부)는 물리적 안정성의 지표로 취급되며, 주거 안정은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과 지역 소속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Manzo & Perkins, 2006; 양은모·배호중, 2023). 특히 주택의 자가 소유는 주민의 장기적 거주 가능성을 촉진하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반영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 및 국가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확장된다는 측면이 강하다(Diener & Suh, 2000). 아울러 이와 같은 정서적 전이 효과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모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경험은 주민이 경험하는 정부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제도적 신뢰 형성의 경로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세무, 보건, 교육 등 일상적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표하는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강화한다(Taylor & Sharp, 2016). 이를 바탕으로 아래 가설 1을 도출한다.

가설1: 주거 안정성이 높고 공공서비스 경험이 많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주민이 정부에 대한 느끼는 신뢰와 투명성의 정도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체제와 제도를 얼마나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요인이다. 절차적 공정성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Tyler,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특성을 크게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정부 신뢰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국가 자부심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Hetherington, 1998). 부패가 없는 정치·행정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정부 투명성과 청렴도는 제도적 정당성 담보하는 핵심 지표로서 시민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Rothstein & Uslaner, 2005).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임재훈·윤영채, 2021). 이때 특히 조세 공정성은 대표적인 절차적 공정성의 요소로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며, 조세 정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통해 국가 자부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의사소통은 국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의 질을 나타내는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의 제고와 소속감 강화를 이끄는 직접적 경로로 작동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2를 도출한다.

가설2: 정부에 대한 신뢰, 투명성, 공정성, 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높아질 것이다.

Putnam(2000)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개인 간 신뢰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개인이 소집단, 지역사회, 사회공동체, 국가로 그 외연을 확장하며 높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의 세 가지 요소로 대인 신뢰, 포용성, 참여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검토하였다. 대인 신뢰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 간 유대감과 상호신뢰를 뛰어넘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진 고신뢰 사회에서는 시민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Delhey & Newton, 2005). 사회적 약자나 타 집단에 대한 이해, 공감, 배려의 정도를 나타내는 포용성은 사회통합과 집단 정체성을 매개하는 핵심적 가치이다(김미정, 2020). 따라서 포용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사회 전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지역 소속감과 국가 자부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결속에 있어 필수적인 행동 요소이며, 특히 지역 수준의 소속감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사회 조직에 소속되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Putnam, 2000).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본의 주요 특성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3을 아래와 같이 도출한다.

가설3: 대인 신뢰, 포용성,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모두 높을 것이다.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위, 소득 수준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제도 신뢰를 규정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 중에서 개인이 갖는 정치 성향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전통적 가치와 국가 상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 국가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Smith & Kim, 2006). 반면 진보적 정치 성향을 지닌 개인은 국가 자부심 그 자체보다 제도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은 개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따라서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자신의 성취를 지역과 국가 발전과 연계하여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지역 소속감이나 국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Inglehart, 1997).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정치체제와 제도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서 지역 소속감이나 국가 자부심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4와 5를 아래와 같이 도출한다.

가설4: 보수적 정치 성향의 개인은 국가 자부심이 높을 것이다.

가설5: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이 높을 것이다.

대표적인 인구 특성 요인으로 고려되는 성별, 나이, 학력을 살펴보면 우선 선행연구들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Smith & Kim, 2006; 이소연, 2022). 이는 고령층이 자신들이 체득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자신 삶의 일부 혹은 전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고학력층은 일반적으로 체제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자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서운석, 2009).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여주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와 지역 활동에 대한 기회구조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성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할지에 따라 지역 소속감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인구 특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설 7과 8을 제시한다.

가설7: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8: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낮아질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변수와 분석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요 영향

요인들을 크게 5가지 특성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우선 첫 번째 종속변수인 국가 자부심 변수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라는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지역 소속감 관련해서 본 연구는 세 개의 종속변수를 광역 수준인 시·도 단위, 기초 수준인 시·군·구 단위, 근린 생활 수준인 읍·면·동 단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항은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시·군·구, 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이 구성되었다. 지역 소속감을 지리적 분석 단위를 달리하여 측정함으로써 소속감의 결정요인이 지리적 단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5가지 특성은 생활 특성, 정부 특성, 사회 자본 특성, 정치·경제·사회 특성, 인구 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생활 특성으로 거처 유형, 점유 형태, 삶의 만족,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를 모형에 사용하였다. 먼저 거처유형에 대해서는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시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가, 점유 형태에 대해서는 자가 거주 시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가 각각 사용되었다. 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0점) 단계부터 매우 만족하는(10점) 단계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는 8가지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0점) 단계부터 8가지 모든 공공서비스를 경험한(8점) 단계까지 측정되었다⁴⁾. 이어서 정부 특성은 정부 신뢰, 정부 투명성, 조세 공정성, 정부와의 의사소통 등 총 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부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신뢰한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인데 국가 자부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주요 국가기관 대상의 정부신뢰 변수를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한 지방정부 신뢰를 측정해서 달리 활용하였다⁵⁾. 정부 신뢰 변수와 유사하게 정부 투명성 변수도 '전혀 청렴하지 않다'부터 '매우 청렴하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인데 국가 자부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주요 국가기관 대상의 청렴도 변수를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한 지방정부 청렴도를 측정해서 차별적으로 활용하였다⁶⁾. 공정성 변수는 특히 우리 사회의 '과제 및 납세'에 대해 얼마나 공정한지를 보여주며 '전혀 공정하지 않다'부터 '매우 공정하다'까지 4

4) 8가지 공공서비스에는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사무소) 서비스, 인허가 서비스,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세무 서비스,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가 포함된다.

5) 주요 국가기관 정부 신뢰를 측정할 때 사용한 6가지 조사항목은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총 6개 대상에 대한 4점 척도의 신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3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6) 신뢰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기관 청렴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6가지 조사항목은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총 6개 대상에 대한 4점 척도의 청렴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0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부 특성의 마지막 변수인 정부와의 의사소통 변수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부터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때 국가 자부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간 소통을 측정해서 역시 종속변수의 수준에 맞추어 적합한 변인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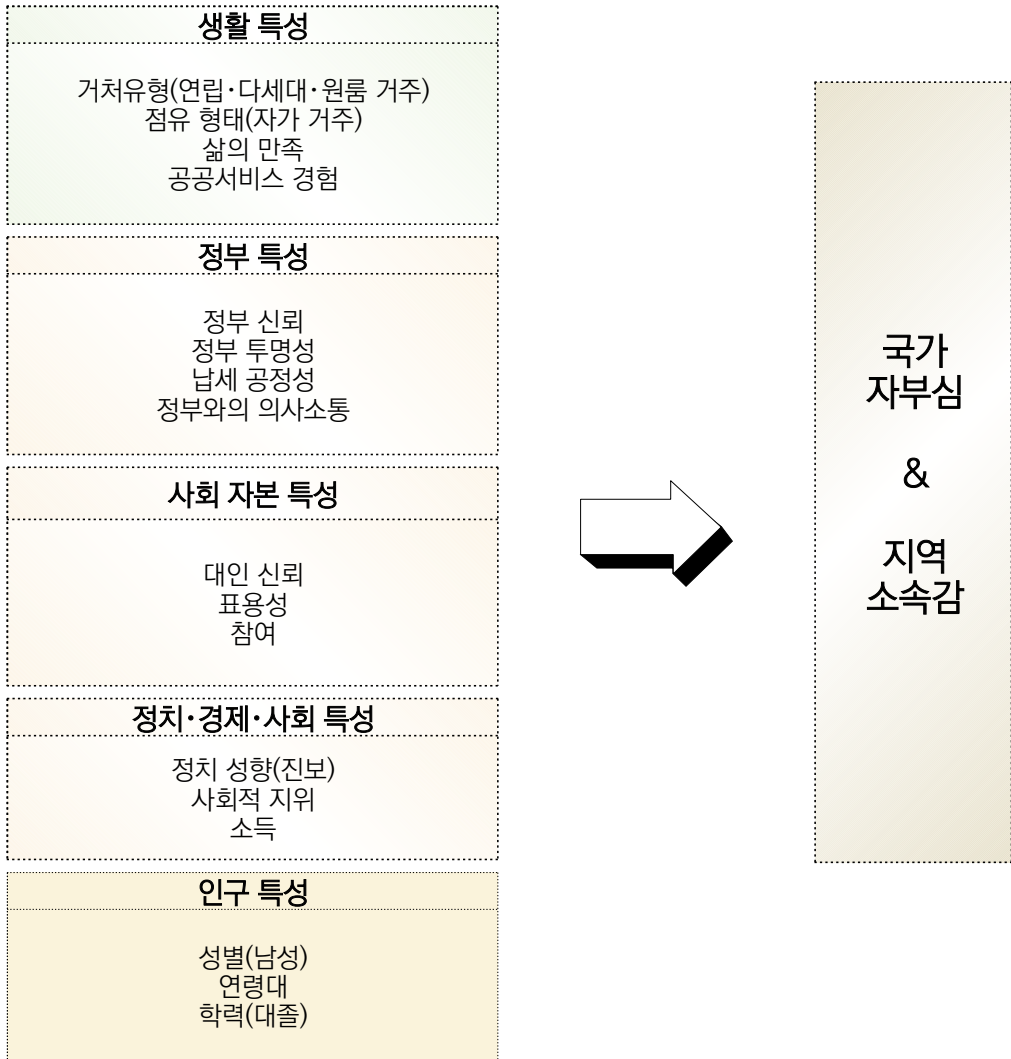
사회 자본 특성에는 대인 신뢰, 포용성, 참여 등 3개 변수가 활용되었다. 대인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다. 포용성 변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타인을 도와주는 것에 관해 동의 수준을 4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이다⁷⁾. 또한 사회참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 변수는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등 총 3가지 유형에 대해 참여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이다⁸⁾. 지위 특성은 정치, 경제, 사회적 입장과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진보적 정치 성향 변수는 정치 이념적 성향을 '매우 보수적'에서 '매우 진보적'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값이 커질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을 띠도록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위 변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매우 낮다'에서 '매우 높다'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로 값이 커질수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소득은 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소득 없음'부터 가장 높은 '천만 원 이상'까지 총 12단계의 순서로(ordinal) 값이 부여된 변수로 1에서 12까지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인구 특성은 성별에 대한 남성 더미변수, 학력에 대해서 대졸 더미변수, 나이에 대해 29세 이하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5가지 단계의 연령대를 서열로(ordinal) 측정된 연령대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5개 특성에 연계된 변수들을 모형에 통제하여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결정요인 모형의 틀은 아래 <그림 1>의 개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구체적으로 포용성 변수는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두 항목을 이용하였다. 두 조사항목의 4점 척도 측정값의 평균이 사용되었고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0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8) 3가지 단체 유형의 참여 수준은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이다. 3가지 유형 조사항목의 5점 척도 측정값의 평균이 사용되었고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0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림 1〉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결정요인 모형



2.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3년에 행정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2013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1년 주기의 연간통계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사회영역별로 파악하는 목적을 갖는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친 분열, 반목,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었고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가 대상이다. 표본추출틀은 2021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가 활용되었으며, 표

본조사구를 추출 후 조사구 내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가구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다(통계청, 2024). 이를 통해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상주 가구원 약 8,000명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효표본은 8,221명이었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법이 원칙이며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총 88개 조사항목에 대해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및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격적인 결정요인 분석에 앞서 먼저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유형, 주택점유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의 차이 검정(t검정)을 시행하고 연령대 변수의 경우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다집단 차이 검정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요약

아래 <표 1>은 본 연구의 전체 관측치 8,221명 표본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두 종속변수 중 국가 자부심 평균은 3.14로 나타났고 지역 소속감 평균은 시도 광역 수준은 2.92, 시군구 기초 수준은 2.90, 읍면동 근린 지역 수준은 2.89로 나타났다. 모두 4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지역 소속감에 비해 국가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광역 수준에서의 지역 소속감이 기초나 근린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생활 특성과 관련하여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비율은 20%, 자가 거주 비율은 74%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6.43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의 평균은 2.19로 나타나 8가지 유형의 공공서비스 중 약 2개 좀 넘는 서비스를 평균적으로 경험하였다. 정부 특성은 신뢰, 투명, 의사소통에 대해 국가 수준과 지방 수준을 나누어 변수를 추출했고 전체적으로 국가 수준에 비해 지방 수준에서 평균값이 커서 지방 단위에서 정부의 신뢰, 투명성, 의사소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뢰 특성에서는 4점 척도에서 대인 신뢰 변수의 평균은 2.53으로 국가 수준 정부 신뢰보다 높았으나 지방 수준 정부 신뢰보다는 다소 낮았고 포용성 변수의 평균은 2.8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참여 변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1.69에 머물러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위 특성에서는 정치

성향 변수의 평균값이 2.91로 다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나타났고 사회적지위는 10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5.52, 소득은 12점 만점 구간 척도에서 평균 3.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특성에서 남성은 전체 표본 중 49%를 차지했고 대졸 비율도 49%였으며 5개 구간으로 측정된 연령대 변수의 평균은 3.43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술통계 요약

구분	변수	주요 서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국가 자부심	3.14	0.64	1.00	4.00
	시·도 지역 소속감	2.92	0.72	1.00	4.00
	시·군·구 지역 소속감	2.90	0.70	1.00	4.00
	읍·면·동 지역 소속감	2.89	0.71	1.00	4.00
생활 특성	연립·다세대·원룸 거주(더미)	0.20	0.40	0.00	1.00
	자가 거주(더미)	0.74	0.44	0.00	1.00
	삶의 만족	6.43	1.46	0.00	10.00
	공공서비스 경험	2.19	1.51	0.00	8.00
정부 특성	국가 수준 정부 신뢰	2.36	0.57	1.00	4.00
	지방 수준 정부 신뢰	2.59	0.72	1.00	4.00
	국가 수준 정부 투명성	2.30	0.57	1.00	4.00
	지방 수준 정부 투명성	2.52	0.72	1.00	4.00
	납세 공정성	2.57	0.75	1.00	4.00
	국가 수준 정부와의 의사소통	2.21	0.63	1.00	4.00
	지방 수준 정부와의 의사소통	2.34	0.74	1.00	4.00
신뢰 특성	대인 신뢰	2.53	0.57	1.00	4.00
	포용성	2.82	0.67	1.00	4.00
	참여	1.69	0.86	1.00	5.00
지위 특성	진보 정치 성향	2.91	0.86	1.00	5.00
	사회적 지위	5.52	1.46	0.00	10.00
	소득	3.64	1.77	1.00	12.00
인구 특성	남성(더미)	0.49	0.50	0.00	1.00
	연령대	3.43	1.44	1.00	5.00
	대졸(더미)	0.49	0.50	0.00	1.00
관측치 수		8221			

2. 종속변수에 대한 주요 범주형 변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이어지는 〈표 2〉는 국가 자부심이 거처유형, 점유 형태, 성별, 학력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

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거처유형과 성별에 따른 집단 간 국가 자부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점유 형태와 학력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가 거주 집단은 비자가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국가 자부심을 가졌고, 대졸 미만 집단은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국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표 3>은 지역 소속감의 수준에 대하여 동일한 범주형 변수를 갖고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이때 지역 소속감 변수는 유사한 분석 결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에서 도출한 3가지 세부 유형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지역 소속감 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앞의 국가 자부심에 대한 t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거처유형의 경우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집단과 비자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역 소속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집단의 경우 국가 자부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단독 거주 집단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지역 소속감의 경우는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학력 변수도 국가 자부심 변수에 대한 차이 검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대졸 이상 집단의 지역 소속감이 대졸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표 2> 주요 범주형 변수에 대한 국가 자부심의 차이(t검정)

변수명	구분	N	평균	t
거처유형	연립·다세대 거주	1614	3.12	0.83
	연립·다세대 비거주	6607	3.14	
점유 형태	자가	6067	3.16	-7.06**
	비자가	2154	3.05	
남성	남성	4053	3.13	0.56
	여성	4168	3.14	
대졸	대졸 이상	3994	3.09	6.09**
	대졸 미만	4227	3.18	

*p<0.05, **p<0.01

<표 3> 주요 범주형 변수에 대한 지역 소속감의 차이(t검정)

변수명	구분	N	평균	t
거처유형	연립·다세대 거주	1614	2.77	9.60**
	연립·다세대 비거주	6607	2.93	
점유 형태	자가	6067	2.94	-9.04**
	비자가	2154	2.80	

9) 3가지 지역 소속감 변수들의 내적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0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평균 값의 사용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남성	4053	2.90	-0.07
	여성	4168	2.90	
대출	대출 이상	3994	2.83	9.82**
	대출 미만	4227	2.97	

*p<0.05, **p<0.01

이어지는 <표 4>는 연령대에 따른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이다. 국가 자부심의 경우 5가지 연령대 집단 중 60대 이상이 평균 3.22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30대가 평균 3.03으로 가장 소극적이었다. 다집단 차이 검정을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F값은 26.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서 적어도 한 집단의 평균은 다른 집단의 평균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속감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이 평균 3.02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29세 이하가 평균 2.77로 가장 소극적이었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은 55.45였고 유의수준은 0.01보다 작아서 역시 한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대에 따른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의 차이(ANOVA)

변수	연령대	N	평균	F
국가 자부심	29세 이하	1191	3.06	26.24**
	30대	1176	3.03	
	40대	1479	3.09	
	50대	1646	3.17	
	60대 이상	2729	3.22	
지역 소속감	29세 이하	1191	2.77	55.45**
	30대	1176	2.79	
	40대	1479	2.85	
	50대	1646	2.93	
	60대 이상	2729	3.02	

*p<0.05, **p<0.01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생활 특성, 정부 특성, 사회 자본 특성, 지위 특성, 인구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래 <표 5>는 국가 자부심과 광역인 시·도 단위의 지역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두 가지 다중 회귀모형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¹⁰⁾. 먼저 국가 자부심 모형의 경우 생활 특성에서 자가 거주와 삶의 만족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가 거주자는 비자가 거

주자보다 국가 자부심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도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변수와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특성에서는 정부 신뢰와 납세 공정성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납세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할수록 국가 자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 투명성과 정부와의 의사소통은 국가 자부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 자본 특성에서는 포용성 변수만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포용성이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대인 신뢰와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위 특성에서는 진보 정치 성향은 부(-)적으로 사회적 지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수록 국가 자부심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국가 자부심은 높아졌다.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소득은 국가 자부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특성에서 연령대 변수는 정(+)적으로 대졸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가 자부심은 높아지며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보다 국가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인구 특성 변수인 성별은 국가 자부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0.156)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이어서 연령대(0.075), 정부 신뢰(0.074), 납세 공정성(0.073), 사회적 지위(0.070) 등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시·도 광역단위 수준의 지역 소속감 모형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와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생활 특성에서 자가 거주와 삶의 만족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가 거주자는 비자가 거주자보다 지역 소속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도 높아졌다. 이에 비해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집단은 비거주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특성에서는 정부 신뢰, 정부 투명성, 납세 공정성, 정부와의 의사소통 등 모든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 투명성, 납세 공정성,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할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 자본 특성에서는 포용성 변수와 참여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포용성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위 특성에서는 진보 정치 성향과 소득은 부(-)적으로 사회적 지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거나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수록 지역 소속감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은 증대되었다. 인구 특성에서는 국가 자부심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대 변수는 정(+)적으로 대졸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은 높아지며 대졸 이상

10)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ng Factor)를 구한 결과 모든 값이 2보다 작아서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에서 야기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회귀모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0.09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이어서 포용성(0.098), 삶의 만족(0.095), 연립·다세대·원룸 거주(-0.075), 진보 정치 성향(-0.055) 등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광역 시·도 단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DV: 국가 자부심		DV: 지역 소속감(시도)	
		b계수	표준화계수	b계수	표준화계수
생활 특성	연립·다세대·원룸 거주(더미)	0.003	0.002	-0.137**	-0.075
	자가 거주(더미)	0.036*	0.025	0.037*	0.022
	삶의 만족	0.068**	0.156	0.047**	0.095
	공공서비스 경험	-0.007	-0.016	-0.008	-0.018
정부 특성	국가 수준 정부 신뢰	0.084**	0.074	0.054**	0.054
	국가 수준 정부 투명성	0.028	0.025	0.033*	0.033
	납세 공정성	0.062**	0.073	0.089**	0.093
	국가 수준 정부와의 의사소통	-0.009	-0.009	0.054**	0.055
사회 자본 특성	대인 신뢰	0.009	0.008	0.021	0.017
	포용성	0.027*	0.028	0.105**	0.098
	참여	0.014	0.019	0.019*	0.023
지위 특성	진보 정치 성향	-0.027**	-0.036	-0.046**	-0.055
	사회적 지위	0.031**	0.070	0.049**	0.099
	소득	-0.006	-0.017	-0.011*	-0.026
인구 특성	남성(더미)	0.006	0.005	0.029	0.020
	연령대	0.033**	0.075	0.027**	0.054
	대졸(더미)	-0.044*	-0.034	-0.072**	-0.050
adj R^2		0.0806		0.1056	
F		43.37		58.11	
N		8221		8221	

*p<0.05, **p<0.01

〈표 6〉 지역 소속감(시·군·구 & 읍·면·동 단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DV: 지역 소속감(시군구)		DV: 지역 소속감(읍면동)	
		b계수	표준화계수	b계수	표준화계수
생활 특성	연립·다세대·원룸 거주(더미)	-0.144**	-0.082	-0.114**	-0.064
	자가 거주(더미)	0.009	0.006	0.014	0.009
	삶의 만족	0.043**	0.091	0.039**	0.079
	공공서비스 경험	-0.008	-0.018	-0.016**	-0.033

정부 특성	지방 수준 정부 신뢰	0.047**	0.049	0.089**	0.090
	지방 수준 정부 투명성	0.036**	0.037	0.035**	0.035
	납세 공정성	0.048**	0.052	0.048**	0.051
	지방 수준 정부와의 의사소통	0.087**	0.092	0.091**	0.094
사회 자본 특성	대인 신뢰	-0.014	-0.012	-0.018	-0.014
	포용성	0.047**	0.046	0.071**	0.067
	참여	0.038**	0.047	0.035**	0.042
지위 특성	진보 정치 성향	-0.013	-0.016	-0.016	-0.019
	사회적 지위	0.042**	0.088	0.039**	0.079
	소득	-0.014**	-0.035	-0.012**	-0.031
인구 특성	남성(더미)	0.025	0.018	0.028	0.020
	연령대	0.061**	0.127	0.053**	0.107
	대졸(더미)	-0.047*	-0.034	-0.059**	-0.042
adj R^2		0.0956		0.1003	
F		52.13		54.93	
N		8221		8221	

*p<0.05, **p<0.01

이어지는 <표 6>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소속감과 읍면동 단위의 지역 소속감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두 다중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시군구 단위 지역 소속감 모형의 경우 생활 특성에서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변수는 부(-)적으로 삶의 만족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집단은 비거주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가 거주 변수와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특성에서는 광역 수준의 지역 소속감 모형의 결과와 똑같이 4가지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 투명성, 납세 공정성,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할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사회 자본 특성에서는 포용성 변수와 참여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포용성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인 신뢰 변수는 시군구 단위 지역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위 특성에서는 사회적 지위는 정(+)적으로 소득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은 높아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진보 정치 성향은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특성에서 앞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연령대 변수는 정(+)적으로 대졸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며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변수는 앞의 모형들 결과와 같이 시군구 수준의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대

(0.12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이어서 정부와의 의사소통(0.092), 삶의 만족(0.091), 사회적 지위(0.088), 연립·다세대·원룸 거주(-0.082) 등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모형인 읍면동 단위 수준의 지역 소속감 모형에서는 자가 거주, 대인 신뢰, 진보 정치 성향, 성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생활 특성에서 삶의 만족 변수가 정(+)적으로 연립·다세대·원룸 거주와 공공서비스 경험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립·다세대·원룸 거주 집단은 비거주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고, 공공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특성에서는 모든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 투명성, 납세 공정성,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할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시군구 수준 지역 소속감 모형의 결과와 같이 재차 확인되었다. 사회 자본 특성에서도 앞의 모형과 같이 포용성 변수와 참여 변수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포용성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 특성에서는 사회적 지위는 정(+)적으로 소득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은 높아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인구 특성에서는 앞의 모형들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대 변수는 정(+)적으로 대졸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 소속감은 높아지며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보다 지역 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대(0.10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이어서 정부와의 의사소통(0.094), 정부 신뢰(0.090), 삶의 만족(0.079), 사회적 지위(0.079) 등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단일한 분석 모형에서 결정요인을 비교하였고, 지역 소속감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근린(읍·면·동)의 각기 다른 수준으로 구분해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다층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국가 자부심은 평균적으로 지역 소속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역 소속감은 광역 수준이 기초나 근린 수준의 소속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역단위보다는 국가 단위의 정체성에 더 강한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 특성에서는 자가 거주로 대변되는 주거의 안정성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연립·다세대·원룸 거주는 지역 소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주거 불안정성이 공동체 유대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정부 특성의 영향력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명확했는데 정부 신뢰와 납세 공정성은 국가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 신뢰, 투명성, 공정성, 의사소통은 지역단위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제도적 공정성과 신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해 느끼는 상징적 자부심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결속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사회 자본 요인 중에서는 포용성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타 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이 주민 개인이 지닌 정체성을 국가와 지역 수준 모두에서 공고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암시한다. 또한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소속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활동이 공동체적 유대의 실질적 기반임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위 특성에서는 진보적 정치 성향이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 반면에 사회적 지위는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안정감이 국가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오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치 성향에 입각한 제도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주민 자신을 국가나 지역에 대한 동일시 현상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소득은 일부 지역단위에서 부정적 영향을 보여줘서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높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이끄는 요소는 아님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특성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모두 강화되는 반면, 대졸 이상 집단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서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이 경험한 국가의 발전 및 성장 과정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수준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고학력층은 제도적 한계와 사회 불평등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측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일련의 분석 결과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그 결정요인에 있어 일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그 형성 과정과 영향 관계에서 분명한 차이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가 자부심은 제도 신뢰와 사회적 지위, 삶의 만족 등 상징적이고 인식적인 요인에 의해 더 강한 영향을 받으나, 지역 소속감은 생활 안정성, 정부와의 소통, 사회참여 등 상대적으로 경험적이거나 관계적인 측면의 요인에 의해 더 강하게 형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국가 차원의 통합과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부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정적 노력과 정책 수행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함께 증진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절차 수립, 조세 정의의 실현,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제도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공동체 자부심은 동시에 제고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지역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 중산층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단순한 시혜적 복지정책의 수준을 넘어 사회통합정책의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에 걸쳐 포용적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포용성의 확대와 사회적 연대 의식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강화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대, 지역,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타 집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소속감 증진을 이끌고 다시 높은 소속감이 참여의 촉진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 제고에 있어 세대를 비롯한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의 낮은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은 자칫 미래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정 홍보,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내면화를 다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이 개인이 갖는 단일한 차원의 감정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가적 통합과 지역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는 관련 정책 대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에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횡단적 성격으로 인한 인과성 추정의 약점과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에 따른 편향가능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설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국가 자부심과 지역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변수를 고려한 모형 설계의 개선도 요청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현근. 2017. “지역공동체기반의 생활자치와 읍면동 사회복지 제도화.” 「대전세종포럼」, 60: 43-76.
- 김민예·문국경. 2025. “근린환경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2(2): 29-58.
- 김상민·이성원. 2025.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39(2): 159-198.
- 남경태. 2022. “국가 자부심과 소비자 적대감이 일본 불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6(3): 5-32.
- 남기정. 2008. “냉전 이데올로기의 구조화와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의 상관관계: 한일비교.” 「한국문화」, 41: 223-244.
- 박경귀. 2017.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45: 2-8.
- 박경화·이승혁. 2024. “개인의 지역 소속감이 사회 소수자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21(2): 237-257.
- 박정인·박민근. 2024. “공정성과 정부신뢰: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2): 1-19.
- 서운석. 2009. “국민자부심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2(1): 165-187.
- 심승우. 2022.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과 평화」, 14(2): 347-386.
- 엄영호·엄광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145-170.
- 양은모·배호중. 2023.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시연구」, 24: 257-303.
- 오유선·주남·김정현. 2023. “국가동일시 정도와 콘텐츠 성격이 국가 자부심, 국가애착,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7(3): 91-134.
- 이동한. 2022. “지역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여론속의 여론」, 180-1호.
- 이보윤·김동훈. 2015.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31(2): 149-176.
- 이소연. 2022. “우리나라, 얼마나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론속의 여론」, 170-2호.
- 이혜경. 2019. “지구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격차와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2019.4).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791-822.
- 임재훈·윤영채. 2021.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정부신뢰의 관계분석: 분위수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9(4): 187-214.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Antonsich, M. 2010. “Searching for Belonging: An Analytical Framework.” *Geography Compass*. 4(6). 644-659.

- Chakrabarti, A. 1992. "Individual and Collective Prid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9(1). 35-43.
- Delhey, J. 2007. "Trust and Self-Rated Health in 33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64(6). 1181-1193.
- Diener, E., & Suh, E.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 Heath, A. F., & Tilley, J. R. 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2). 119-132.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 London: Routledge.
- Manzo, L. C., &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335-350.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 Scannell, L., &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1-10.
- Smith, T. W., & Kim, S. 2006.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127-136.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Chicago, IL: Nelson-Hall. 7-24.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igging, J. A., Wiggins, B. B., & Zanden, J. V. 1994. *Social Psychology*. 5th ed. New York: McGraw-Hill.

박윤환: 현재 경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빈곤, 주택, 이민, 범죄, 사회계층, 거주지 분리 등 도시 정책에 관한 주제임. 주요 저서로는 『도시행정: 뉴노멀 실대의 패러다임 전환』(2022), 『쉽게 쓴 사회과학 기초통계』(2023) 등이 있고, 최근 논문으로는 『1인 생활 만족이 1인 가구 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년과 노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5),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2025) 등이 있음.

ABSTRACT

Determinants of National Pride and Local Attachment among South Korean Citizens

Yoonhwan Park*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and compare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pride and local attachment among Korean citizens through a unified analytical model. To highlight its distinctiveness from previous studies, local attachment is examined at three levels—metropolitan, municipal, and neighborhood—allowing f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determinants. Using data from the 2023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 that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rust in government, perceptions of tax fairness, social status, and age are associated with greater national pride. In addition, local attachment increases among those who own their homes and exhibit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government trust and communication, inclusive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Conversely,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a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s tend to display lower levels of both national pride and local attachment. By integrating these two dimensions within a single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and regional governance in Korea.

Keywords: National Pride, Local Attachment, Social Identity Theory, Determinants

* Professor.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ivision of Public Service, Kyonggi University.